

청소년 SNS 이용 제한, 하반기 발의됩니다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월 22일 입법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.
구글·메타·네이버·카카오 등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.

01

만 14세 미만 단독 가입 제한

보호자 동의 없는 SNS 단독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.

02

과의존 유발 알고리즘 규제

무한 스크롤 등 추천 알고리즘·서비스 설계에 플랫폼 책임을 부과합니다.

03

과태료 최대 5,000만 원

미이행 플랫폼에 부과하고,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 제도로 집행합니다.

방미통위, 입법 방침 공식화

- 2026.03.30 성평등가족부, 전국 156만 명 대상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
- 2026.04.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 노력 설명자료 배포
- 2026.05.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아동·청소년 SNS 학부모·교사 의견 청취
- 2026.07.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관계 부처 협력 방침 보도자료 배포
- 2026.07.29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, SNS 가입 시 부모 동의제 검토 입장 표명

다음 단계

NEXT MILESTONE

하반기 중 규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.

누가, 무엇으로 규제받나

규율 대상

SCOPE

구글·메타 등 해외 플랫폼과 네이버·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을 모두 포함합니다.

이용자 수 기준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
집행 수단

ENFORCEMENT

미이행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하고,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합니다.

5,000 만 원

규제 미이행 플랫폼
과태료 상한

해외 주요국 규제 동향

호주

16세 미만 금지

영국

야간 이용 제한

시행·추진국

20+

지금 점검해야 할 세 가지

- 01
 - 만 14세 미만 이용자 식별·보호자 동의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사전 검토
- 02
 - 추천 알고리즘·무한 스크롤 등 과의존 유발 기능 내부 점검
 - 기준 확정 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
- 03
 -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여부 확인
 - 대상 해당 시 지정 절차 사전 파악

남은 쟁점

연령 인증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, VPN 우회 차단,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집행력이 핵심 쟁점입니다. 아동 보호 규제가 전 이용자 신원 인증 의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

입법정책의 변화,
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.

— ISSUE TRACKING

— POLICY INSIGHT

— CUSTOM REPORT

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

LAWSECTION.AI.KR

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